

굴업도 프로젝트의 추진 경험과 교훈

이 익 환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추진반 본부장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 절차, 지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8 년 고리 1호기의 가동 이래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방사성 물질 이용 기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84년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칙을 의결하고 88년 5월 원자력법 개정시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88년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종합 관리 시설 건설 일정 등의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방침」을 의결하여 방

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 수행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위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사업 전담 기구로 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설립(90. 10)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89년에 경북 영덕 지역에서, 90년에는 충남 안면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부지 선정이 백지화되었다.

91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6개 지

역을 추천하여 부지로 선정코자 하였으나 이 역시 각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이후 여러 곳에서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 표명이 있었으나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막연한 피해 의식,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지원 사업의 근거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촉법)을 국회에 상정, 제정(94. 1. 5)하였다.

또한 법정부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 위원회」와 실무 작업 추진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94. 10. 29)하였다.

이후 기존 6개 지역과 도서 지역을 포함한 10개 후보 지역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서 마침내 웅진군 굴업도 지역을 94년 12월 최종 후보 지역으로 결정, 95년 2월 27일 시설 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추진 경위

방촉법을 근거로 한 굴업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은 시설 지구 개발 사업, 지역 지원 사업, 토지 매수 및 이주 대책, 지역 홍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1. 시설 지구 개발 사업

시설 지구 개발 사업은 방촉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지역협의회,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 후 시설 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동 계획

에 따라 개발 사업이 수행되었다.

개발 계획은 시설 지구내 시설로서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과 부대 시설로서 항만 시설, 공통 지원 시설, 복지 시설, 녹지 및 기타 시설이 있고 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은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약 7년간으로 계획하였다.

지정 고시후 개발 사업 실시 설계 승인을 받기 위한 용지 조성과 항만 시설 실시 설계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5년 5월부터 굴업도 일원에 대한 부지 특성 조사를 수행하던 중 그 해 10월 굴업도 인근 해역에서 활성 단층의 징후를 발견하고, 그의 세부 조사 및 검토 후 종합 분석 결과 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12월 16일 지정 해제(과기처 고시 제1995-14호, 95. 12. 21 관보 고시)함으로써, 그때까지 추진되던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은 중단되었다.

2. 지역 지원 사업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은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으로 구분되어 건설 기간 및 운영 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건설 기간중 매년 50억원, 운영 기간중

매년 30억원의 지원이 계획되었다.

또한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과 시설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부지 선정 발표시 500억원의 지역 발전 기금 조성이 약속되었고, 지원 사업 전담 법인으로 설립(95. 5. 22)된 덕적복지재단에 95년 6월 30일 특별 지원금으로 출연되었다.

이에 앞서 이 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지역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처와 사업자는 공청회를 거쳐 지원 사업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확정하여 소득 증대 및 육영 사업을 시행할 기반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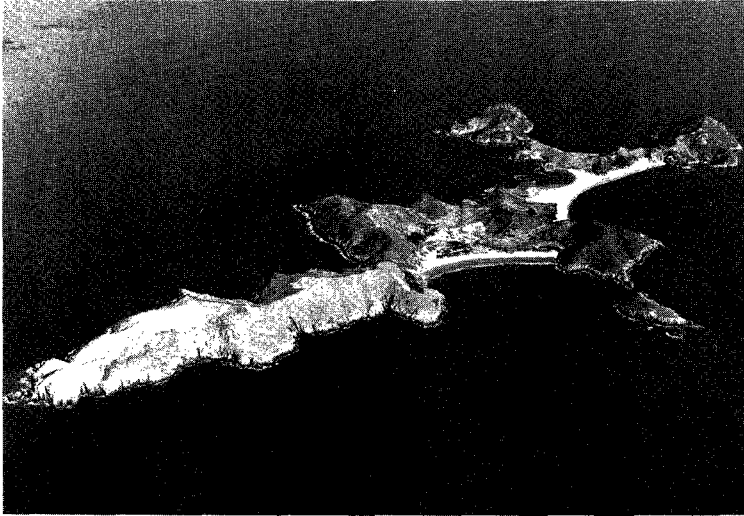
3. 토지 매수 및 이주 대책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및 이주 대책 업무는 시설 지구를 관할하는 웅진군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되었다.

95년 5월 3일 위탁 협약 후 계획된 추진 계획에 따라 편입 토지, 건물, 공작물(담장 등), 기타 사항(가축 등)에 대한 현황 조사가 수행되었다.

실제 이용 토지 현황에 대하여 95년 6월 19일에서 7월말까지 측량이 수행되었고, 토지 및 물건 조서는 95년 8월 7일 완료되었다.

공통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95년 6월 29일 웅진 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고,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보상 계획이 열람 공고되었



굴업도 전경. 95년 10월 활성 단층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었다.

으며, 1차 보상심의위원회가 95년 9월 30일 개최된 것을 끝으로, 활성 단층 발견으로 인하여 토지 매수 업무가 중단된 후 지정 고시 해제를 맞이하였다.

4. 지역 홍보

굴업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 홍보는 지역 주민 홍보, 해외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시찰, 언론 홍보 및 광고, 반핵 활동 조사 및 대응 등의 내용으로 수행되었다.

지역 주민 홍보는 지역 주민 및 인천 시민 단체, 공무원, 언론인,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총 31건 연인원 916명이 참석한 원자력 관련 시설 시찰 및 설명회, 총 18건에 달하는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기타 서한문 발송 등이 수행되었다.

해외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시

찰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본·스웨덴·영국·프랑스 등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시찰이 여덟 차례 수행되었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목적으로 한 언론 홍보는 총 18건에 달하는 보도 자료 배포 및 투·기고가 있었고, 지방 일간지, 주간지, 잡지, 케이블 TV에 22건(총 141회)의 광고를 게재, 방영하였다.

굴업도 프로젝트 수행 결과 분석

위에서 살펴본 추진 경위를 통하여 각 사업별로 경험 사례에 따른 굴업도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 지구 개발 사업

시설 지구 개발 계획 공고 후 동 계

획은 원자력위원회 심의 의결 전 지역협의회 심의 과정을 거쳤으나, 협의회의 대다수가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 개발 계획에 대한 원래 심의 기능보다는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만을 전달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원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과 시설 지구 지정 고시 전까지 한시적인 성격인 협의회에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설 지구 개발 계획 수립은 적합 후보 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참여를 극대화시켜 시설 입지 적합성 여부 조사 후 시설 지구 개발 사업 계획 및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확보를 고려한 지방 자치 단체 중심의 시설 지구 유치 공모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지원 사업

특별 지원금 지원 시기를 건설 기간 전에서 부지 조사를 통하여 부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 범인에 의한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찬성측 주민의 대표성 문제, 주민 대표의 경영 능력 부족, 감독 권한이 없는 사업자 권한 미약 등의 측면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 지원금의 지원 사업 시행에 있어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부여하고, 연간 지원금의 지원 사업 중 소득 증대와 육영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권한 및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아울러 수혜 대상 지역의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간 지원금과 특별 지원금의 성격과 용도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특별 지원금의 지원 규모, 사용 용도, 수혜 범위, 시기 및 기간과 시행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시설이 분리될 시 지원 방법 및 규모의 검토와 시설별 공정의 상이, 시설 추가 확장, 운영 기간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한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량 규정인 인접면의 여부와 언급되지 않은 지원비율 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원 사업 수립 절차 중 장기 계획 수립 시기·범위·계획 기간 등의 명시, 그리고 연간 계획의 공청회 필요성, 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사후 처리 규정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지역 홍보

지역 주민 홍보에 있어 보다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관공서를 통해 선별된 신망있는 지역 대표성 인사 및 여론 주도 인물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반핵 단체들의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활동에 주민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해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시찰 후 해의 시찰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역 내 긍정적인 여론의 형성과 향후 여러 계층별로 해의 시찰단을 구성하여 국민 홍보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의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 시청 출입 기자들의 공정치 못한 언론 보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비하여 지역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볼 때, 언론을 이용한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균형있는 지역 담당 기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굴업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자립 차원의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 및 정책 입안 기관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원자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높여 대국민적 차원의 협조를 구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부지 선정시 후보지역(들)의 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사전 부지 정밀 조사를 통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의 수립 및 절차 수행 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이 주민 수용성 증대에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 방식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천층 처분 방식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체계에 있어 각 관련 기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 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사용 범위 등은 그 목적에 적합토록 조정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는 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하여 쉽고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와 자발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반핵 단체에 대한 주민의 동조 방지와 지역 이해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조 아래 원자력 관련 기관의 홍보 협조 체계 구축 및 홍보 요원의 전문화 등이 요구된다.